

9월 정기국회·국정감사에 바란다



전국농민연대
강민수 사무국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시던 선조들의 말씀처럼, 들판의 곡식 익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부른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수확철은 다가오는데 농민들의 마음은 긴 시름에 잠겨있다.

늘어가는 부채에 아이들 학비걱정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데 유독 농산물 값만 제자리 그나마 추곡수매제마저 폐지되어 불안감이 더해 가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제시되는 대책들마다 아랫 돌 빼어 웃돌 꺾는 격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정부정책이 갑론을박만을 거듭한 지난 10년간 농가의 소득은 1.8배 증가한 데 비해 농가부채는 약4배 증가하였으며, 농민과 도시민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1995년 도농간 소득격차가 95.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80.6%로 농가소득 비중이 낮아졌으며, 2003년에는 76.2%로 도농간의 소득격차 더욱 확대되었다. 여기에 농가호수는 155만호에서 124만호로 농가인구는 485만명에서 341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중 농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60세이상의 농민이 농업취업자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다.

과연 지금과 같은 상태로 농업과 농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협상이 마무리되었고 WTO/DDA 농업협상 FTA 협상의 진전등 농업을 둘러싼 중요한 외적 조건들이 올해를 경과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들어 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 저러한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일 없을 것으로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농민들은 지난 경험을 통해 직감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 6월 여러 농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쌀 협상 국 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싸움을 전개 한 것은 쌀이 우리농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쌀 협상 비준동 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로 하였다.

그러나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아직까지 농민들이 안심할 만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 이 현실이다.

오히려 일부 언론은 정부가 농민들의 투쟁에 또 손을 들었다고 하면서 농민들의 투쟁을 집단 이기주 의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농업, 농 촌이 이토록 어렵게 된 근본원인은 농민들이 정부의 과도한 보호 하에서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농민들은 지난 30, 40여년간 농촌의 수탈 을 기초로 한 산업화 발전전략의 희생양이었으며 지 난 1970년만 해도 80.5%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5.3%로 급락한 것은 1994년 UR라운드 이후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농업시장 개방 때문이다.

근래에 와서 한편에서는 이러저러한 변화를 이유 로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장경제와 무

역자유화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에 비해 영세소농이 전체농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취업자 1인당 보조금 수준은 미국과 EU의 1/9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WTO 체제는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 활용 해 온 국경보호와 국내보조정책의 활용을 우리와 같 은 개도국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시장경제 와 무역자유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농업에 대한 시장의 실패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정부의 개입은 선진국 농업정책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유화와 시장경제일변도의 농 업정책이 비판받고 있다.

막대한 농업보조금이 거대기업위주로 돌아가고 미국농촌의 뿌리인 소농, 가족농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 농촌의 회생을 위해 우리가 지금 근 본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는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하는 데 있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도 여기에 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라는 것이 본래 정부정책의

성과를 따져 묻고 이를 통해 잘못된 것은 벌 주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 법제화하는 데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농민들이 거는 기대란 이리저리한 변화에 관계없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일 것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에는 관심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날을 쉰 것이 지난 날 국회의 역사였다. 이번 국회가 그런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농업과 관련하여 이번 정기국회가 해낼 일은 무엇보다 농민들이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수차례 강조해 왔듯 식량자원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안보상의 문제로 최소한의 자급능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수립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목표와 수단, 재원규모 등 농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농지의 보전규모 등의 기준 근거를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지난 쌀 재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농업통상시스템의 문제점을 교훈 삼아 이후 있을 WTO/DDA 농업협상, FTA 협상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밖에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처음 실시되는 공

공비축제의 문제점을 제도시행 첫해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한다거나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우리농산물의 지원과 소비의 확대, 부채대책,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의 제정과 정비를 꼼꼼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주장한 것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잘 아는 친구 얘기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친구의 옆 마을로 서울에서 지인이 이사왔는데 이분이 사이버대학을 수강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했는데 10가구 이상이 신청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이다.

어찌어찌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누구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농촌에 내려와 살겠냐는 것이다.

효율이라는 잣대만으로 세상의 모든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 먹을 것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정부와 언론이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